의안 번호	4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14. 12.

사회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의안 번호	40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1일
제 안 자 : 사회건설위원장

1. 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 2014.11.26(수) ~ 12.3(수)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의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복지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 감사대상 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무

4.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가나다순)	사무보조자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사장소	감사내용	비 고
1일차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 공개질의 및 답변 - 종합평가 - 강평	

6. 감사방법

○ 해당 감사반의 각 국별 실시
○ 현황보고 및 청취
○ 보충자료 제출 요구
○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답변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시정 및 지적사항 : [붙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참조

붙임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부. 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11.26 (수)	김길자	**〔영등포역 맞은편 노점 개선방안〕** 영등포역 주변 40여 개의 노점상 난립으로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특히 이 노점상들은 버스 정류장 주변까지 점유하고 있어 버스·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도로까지 나가서 탑승하고 있어 정말 위험한 상황임.	- 구에서는 지난해 노점을 규격화하여 개선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도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음. - 시민들의 보행과 영세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함.
2	11.27 (목)	강복희	**〔통합사례 관리운영의 예산집행에 따른 부실한 관리감독 시정요구〕**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위해 사례관리사를 5명 채용하여 사례관리사 1명당 16명의 소외계층 주민을 배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실적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채용된 사례관리사의 거주지를 살펴본 결과, 5명 모두 우리 구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우리구민의 취업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채용된 사례관리사의 근무태도과 자료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이들에게 지급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할 것. - 타구 주민을 사례관리사로 채용하기에 앞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	11.27 (목)	권영식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현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에 의거, 연 2회 지급하고 있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표시이며, 조례에 규정되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에도 위문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에서 누락된 인원이 상당한 수에 달함. 감사 결과, 전체 등록대상자 6,354명 중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25명에게만 위문금이 지급되고 있고, 낮은 지급률을 높이려는 노력도 부족해 보임.	- 위문금은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미지급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급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임. - 따라서 보훈단체 지회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에게는 조례에 근거하여 위문금이 지급되어야 함.
4	11.27 (목)	권영식	**〔노상주차장 체납금에 과다한 가산금 부과〕**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고 2개월이 경과되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주차요금 외에 4배의 가산금을 일시에 부과하면서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징벌적이고 고압적인 행정처리로 판단됨.	- 과태료나 벌과금은 계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부과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함. - 주차장 관리자의 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체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주차장 관리자에게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이용자에게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행정이므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	11.27 (목)	권영식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본질적 문제점〕**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우리구가 발전소 소재지 반경 5km 내에 위치하여 내년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인 바, 발전소의 피해물질 배출로 인해 우려되는 구민들의 건강에는 아랑곳없이 지원금으로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음.	- 대기환경은 건강한 삶의 기본이므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성격이 구민에게 가는 피해의 방패막이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아울러 배출가스 검측을 철저히 하고, NOx(질소산화물), SQx(황산화물)과 Dust(먼지) 등의 각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배출가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 구민의 건강에 위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는 북풍이 불어 발전소가 소재한 마포구와 인접한 여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피해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6	11.27 (목)	권영식	**〔건축선 후퇴공간 관리〕** 건축선 후퇴공간은 건축법상 공공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보행이나 도심 활동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주차와 적치물은 물론 고정물까지 설치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건축선 후퇴공간은 비록 사유지이지만 구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야 하는 공개공지로서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음. -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본회의 구정질문과 소관부서에 시정요청을 통해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건물주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김. - 공명정대한 법적용으로 쾌적한 보행환경과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	11.28 (금)	권영식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로 확보와 주차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대기환경 개선과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구민들의 체력증진에도 기여하는 사람 중심의 행정임. 그러나, 실제 행정은 자전거 도로의 단절, 자전거 도로상 불법주차 방치 및 신축건물 앞 자전거 도로 폐지 허용 등 취지에 반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을 활성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특히, 신축건물 앞 자전거 도로 폐지를 통한 자전거 도로 단절 현상을 초래하는 관리는 재고되어야 하고, 도로변 자전거 무단주차로 자전거 도로 운영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개선하고 적절한 공간에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주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8	11.28 (금)	권영식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 및 대형 화물차 배정〕**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원칙적으로 승용차와 1톤 이하 화물차에게 우선 배정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남는 공간이 있을 경우 대형차량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주민들로부터 대형 차량으로 인해 지정주차면 배정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음.	- 골목길 주차난 해결과 쾌적한 거리질서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허용된 차량 외 대형 차량에 대한 주차면 배정은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하고, 부정으로 주차된 대형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이동조치를 하여야 함. - 대형차 배정은 차고지 증명에도 문제가 되고 2면 이상의 과다점유의 문제점과 사고 위험도 상존함. - 또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써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	12. 1 (월)	김길자	**〔구립 청소년독서실 어르신복지센터 전환 검토〕** 현재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정보문화도서관,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이용자 증가와 독서실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음. 평상시에는 독서실 이용자가 10여 명 정도로 이용자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음.	- 구립 영중경로당 2,3층에 소재하는 영중독서실은 근거리에 독서실들이 많아 이용자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영중독서실 이용자에게 근거리에 있는 영중로 평생학습관 독서실과 구민회관 독서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편입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12. 1 (월)	박미영	**〔여의도동 청소용역 계약 개선〕** 여의도는 국제금융특구지역으로 대한민국의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정치, 경제, 금융, 언론, 문화의 중심지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중심업무지역임. 따라서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환경의 불결로 격조 높은 금융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떨어뜨림. 민간청소업체 용역은 인력의 단가가 직영인력의 50%에 미치지 않아 용역 하청 인력의 노동의지나 노동의 질이 크게 저하됨. 특히 여의도는 용역비를 절약하기 위해 영등포에서 유일하게 민간청소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이는 독과점 형태의 제한경쟁입찰로써 10년 이상의 장기 위탁계약 형태로 안이하고 경쟁력 없는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여의도는 영등포구의 직영 청소 지역으로 환원하여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격조 높은 금융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청소관리가 절실히 요청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	12. 1 (월)	박미영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사업 평가〕** 음식물 쓰레기 RFID(전자계량)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36%를 목표로 쓰레기 ZERO 정책의 수단으로 추진되었음. 2012~2014년까지 영등포구는 공동주택에 RFID 962대를 설치하여 서울시 시행율 9.4%에 비추어 볼 때 선두주자로 서울시 타구의 주요 정책 지표로 활용됨. 영등포구 음식물 쓰레기 RFID 기기 감량효과는 33.3%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과장된 데이터임. 2011년 대비 2013년 감량율은 5.6%이며, 2014년 감량율(2014.10월기준)은 1%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합계 수치임. 공동주택 RFID와 비교할 2012년 이전의 공동주택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감량률(2013년 5.6%, 2014년 1%)은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감량수치 데이터임.	-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감량효과 33.3%는 허위과장 데이터이므로 즉시 삭제하고 시정조치하여야 함. - 잘못된 33.3% 허위과장된 감량율은 서울시 타구의 잘못된 정책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 음식물 쓰레기 RFID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1%에 그치고 있음. - 본래의 사업목적을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야 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	12. 1 (월)	박미영	**〔청소년 독서실 운영 개선〕** 청소년독서실은 지역사회 저소득 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공익시설로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특히 3년간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3년 65억 6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함. 특히 구립 정보문화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등의 독서실 대체 시설의 증가로 독서실 이용 고객이 분산되는 등 외부환경이 변화되어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14년 청소년독서실 이용현황율은 44.3%이며, 현재이용율 30% 이하 및 일일이용객 20인 이하의 독서실은 총 4개소로 청소년 운영공간을 통폐합 또는 용도변경하여 적자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독서실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통폐합 적극 추진 요망.
13	12. 1 (월)	박미영	**〔클린하우스 정거장 추진 계획의 문제점〕** 클린하우스 정거장은 현 운전배출 수거 방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미준수 및 무단투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4년 11월 현재, 영등포구 관내 20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예정지 15개를 합해 총 35개 클린하우스 정거장 설치가 추진될 예정임. 영등포구 18개동 중 미설치 지역이 9개소이며, 이중 영등포본동에 9개소가 편중되어 지역안배에 대한 노력이 결여됨.	- 영등포 관내의 무단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심각한 실정이며 이런 민원에 비추어 볼 때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홍보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을 설득하고 현장중심으로 홍보하여 합리적 지역안배를 하는 적극적 행정이 요구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4	12. 1 (월)	박유규	**〔동별 경로당 분포 차이에 대한 문제〕** 동별 경로당 수가 어르신 인원에 비교했을 때, 불균형이 심한 곳이 있으며, 구립경로당의 분포도 차이도 심함. 특히 어르신 인원이 비슷한 동 가운데에도 어떤 동은 구립 경로당이 4곳인가 하면 어떤 동은 1곳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운영비 지원에서도 차별화가 심함. 이로 인하여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선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어르신들께서 불편해 하심. 또한 시설의 불균등으로 경로당 어르신의 이용도 면에서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음.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서 복지의 형평성이 보편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봄.	- 동별 경로당 수를 어르신 인원에 비례하여 격차가 나는 것을 보완하여, 동별 구립 경로당 개수도 차이가 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15	12. 1 (월)	유승용	**〔청소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현재 청소행정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각 동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각각 다른 업체들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게다가 청소업체들이 구청과의 장기간 계약으로 인해 타성에 젖어 주민의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이 원활하게 조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도 나날이 증가하여 골목길 미관 저해도 심각함.	- 청소 대행업체가 이원화된 지역은 하나의 대행업체로 일원화하여 용역계약을 한다든지, 전 지역을 직영화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무단투기 단속에 관내 주민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무단투기 예방 및 세수 확보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검토 요망.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6	12. 1 (월)	유승용	**〔가로정비(노점상,적치물) 단속 관련〕** 가로정비 용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효과가 저조하여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발생 및 거리환경 질서 유지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대림동, 대림 전철역(환승역) 부근은 역세권으로 많은 구민들과 외부인이 통행하고 있어 특별한 가로환경 정비 대책이 요구됨.	-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나 구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속시 포장마차 업주와 적치물 상점등에서 많은 저항이 예상되므로 검찰, 경찰과 합동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거리질서 및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해결대책 수립이 요망됨. - 해당부서에서는 가로정비 예산을 증액하고 단속원을 충원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행정처분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음.
17	12. 1 (월)	윤준용	**〔양평로 30길 일대 통행로 조명 설치 및 환경정비〕** 양평로 30길 일대에 통행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보도정비, 환경정비가 안되어 있고 조명이 없어 일몰 후 통행이 어려움.	- 해당지역에 훼손된 보도는 정비하고 조명(가로등, 조명등)을 설치하고 낙엽 등을 제거하는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 확보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람.
18	12. 1 (월)	윤준용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대형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대형 차량이 불법 주차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신고를 해도 위반스티커 발부나 견인을 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대형 차량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함으로써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9	12. 2 (화)	강복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정기탁금 구매내역의 부적절성에 따른 부당함 및 책임촉구〕** 소수의 특정업체에 7천만원~1억 2천만원까지 물품을 집중구매하면서 기존가격의 25%~225%까지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기탁금을 상당부분 손실시켰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뒤로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현 운영책임자들의 자질 및 앞으로의 운영에 많은 의혹과 걱정을 남겼음.	- 공적자금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에서 막대한 자원을 관리하면서 많은 재원을 소진시키고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무조건 몰랐다 라고 일관하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임. - 생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면 그에 따른 적정한 행정적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며, 그래야만 '사회복지협의회' 가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복지단체가 될 것임. 추후 물품구매에 대한 자체 감사시스템이 필요하고 또다시 같은 상황발생시 합당한 행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해당부서에서는 비싸게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 구매처에서 부당이익 만큼 환불받을 수 있는지 검토 요망.
20	12. 2 (화)	권영식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횡단자의 책임이 크지만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행정부의 책임도 있음. 도림로는 6차선의 넓은 도로이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반인의 무단횡단도 많고 특히 대영초·중·고등학생들의 무단 횡단은 매년 몇 건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대책이 필요한 곳임.	- 3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도로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임. - 무분별한 주차와 차량의 무단회전과 사람과 자전거의 무단횡단을 막아야 하는데도 문제점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곳임. - 교통사고는 사고후유증이 당사자는 물론 한 가정의 파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중앙선에 휀스를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막고 차량의 무단회전도 막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여 설치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1	12. 2 (화)	권영식	**〔영등포실버케어센터 이전계획의 문제점〕** 신길4동 재개발 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영등포실버케어센터(389㎡)의 이전계획에 의하면, 이전 대상지가 현 위치보다 열악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가치의 손실을 가져 오게 되고 건물이 비탈길에 있어 어르신이 이용하는 건물로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현 위치와 같은 평지의 대로변에 위치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전으로 인한 재산가치 손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에 따라 재검토를 약속받았음.	- 관리자인 구청 관할부서의 부적절한 관리는 구민의 자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여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 현 위치의 지가와 이전대상지의 지가가 차이가 나서 공시지가로 200,254,400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현 시가로 3억여 원의 손실을 막는 역할에 구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더욱더 재산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해줄 것을 촉구함.
22	12. 2 (화)	권영식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범람하는 현수막〕**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철거가 필요함. 휴일에도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금요일 오후만 되면 급증하는 게시물은 가로변을 점령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사고의 위험이 따름. 또한 공공건물 현수막 설치 및 정치성을 띤 단체나 개인의 현수막을 1개월 넘게 게시하는 경우가 있음.	- 법은 공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며, 정치성을 띤다고 해서 철거나 과태료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힘과 권력이 있을수록 법의 잣대를 엄하게 적용하여 거리질서를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함. - 지난 6.4 지방선거 전에 공공건물에 “서울시 인센티브 1위”라는 현수막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7월까지 게시되어 있었는데, 설날이 한참 지난데다 인센티브 실적이 구민을 위한 공익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임. - 행정부에서 위법을 하거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며 구민의 눈총을 받는 일도 없기를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3	12. 2 (화)	권영식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협의회의 피감자세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가 하면 대안을 제시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며, 오직 구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피감기관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의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피감자는 자료제출이나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도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료제출과 출석요구에 4일 동안 응하지 않아 감사 업무에 차질을 생기게 하고 감사위원들을 농락하는 등 있어서는 안될 문제가 발생하였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의 해명 발언을 들어보면, '업무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 '협의회 회장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자존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는 등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감히 말하건대 구민의 뜻에 반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려운 분들을 도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받는가 하면 구민의 세금 3억 여원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건실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고, 후원자와 수혜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산낭비를 막고 적재적소에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자료제출과 출석을 거부하면서 우회적으로 감사를 종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가 하면 감사위원을 회유하는 듯한 형태가 있고 진실을 공개하면 후원이 끊어져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는 등 본질을 흐리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됨. - 비리가 있어도 눈감아 주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후원금을 비적절하게 사용하여도 눈감아 달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음. - 이러한 자세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선의의 후원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수급자에게는 정당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업무를 수행해야 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4	12. 2 (화)	권영식	**〔보육료 부정 수급자 처분 후 관리〕** 교육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의 책임의식이나 공평성이 앞서는 것이 우선이어야 함. 부정수급이란 사기, 사문서 위조와 유사한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보조금반환, 운영정지, 종사자 행정처분, 일부는 과징금 등의 처분으로 부정행위 근절에는 미흡한 조치로서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수급을 받으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허위조작 등으로 사후 발견의 허점과 적발시스템이 부재하는 듯 함.	- 매년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한 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음. - 법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횟수나 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차등지급하여 위법한 보육업자에 부정수급보다 몇배의 손실이 따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여야 함.
25	12. 2 (화)	김길자	**〔주택가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장소이전 검토〕** 주거환경 변화로 기존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주변이 주택가 밀집지역이 되어가고 있어, 무료 급식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숙자들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위환경 악화 조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	-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는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 검토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6	12. 2 (화)	박미영	**〔2014년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의 문제점〕** 본 사업은 양평한솔 아파트 옆 공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유발됨에 따라 자투리땅을 녹화하여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내용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최초 계획한 사업규모는 250㎡로 예산확보하였으나 실제 사업규모는 200㎡에 그침. ② 수목식재할 수목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③ 본래 녹화사업인데도 사업시행 중 운동기구 놀이시설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며, ④ 오랫동안 녹지대를 형성하던 스토로브 잣나무와 꽃사과나무 3주(株)와 목백합나무 2주(株) 등 총 6주(株)의 식목을 절단하고 뽑아내는데 무려 1,160여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음. ⑤ 녹화사업의 사업목적에 배치되어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4,232만원의 예산을 낭비함.	- 사업내용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무단적인 사업내용 변경은 경계해야 함. - 푸른도시과는 그린(Green) 영등포구를 지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본연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바라며,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수목을 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로 구의 재산인 수목을 보호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하길 바람. - 또한, 수목을 함부로 폐기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말 것이며 녹지를 재활용하여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7	12. 2 (화)	박유규	**〔대림3동 원지어린이 공원 분수대 문제〕** 어린이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 시설은 경사가 너무 심해 어린이들이 오르내리면서 넘어질 염려가 있음. 오르내리는 구조 자체가 뾰족한 부분의 시멘트로 시공되어 있어 넘어질 경우 다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재공사의 필요성이 있음.	- 어린이들이 넘어질 경우 크게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지금 시설을 개수하여 바닥분수로 만들어야 함.
28	12. 2 (화)	박유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재임명〕**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 근무년수를 확인해 본 바, 3년 임기에 초임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고 대다수는 2회 이상 재임하고 있으며 심지어 4회씩 재임하고 있는 곳도 있음. 작년 개정된 보육조례에 의하여,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장 재임기간이 12년이 지나 장기간 늘어날 수 있는 실정임. 이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기간에 걸쳐 운영하기에 경험과 경력으로 인한 장점도 있겠지만 장기간 재임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및 다른 사람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창의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장기간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 영유아 보육법에서 위탁기간과 횟수 제한을 규정하는 개정이 요구됨. - 선발 과정에서 장기간 재임한 원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원장 모집 홍보에 주민들께서 접근이 다양할 수 있도록 프랑카드(현수막)을 1동에 2개 정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달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9	12. 2 (화)	유승용	**〔건축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철저〕** 건축물대장에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불법증축된 부분과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금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금액은 11월말 현재 주택과에서 부과한 587백만원(423건), 건축과에서 부과한 1,428백만원(110건)으로 상당한 금액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방치하지 말고 징수노력을 기울여 세수확보에도 기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기 바람.
30	12. 2 (화)	윤준용	**〔대형차량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 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형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차단속실적이 미비하고 밤샘 주차단속 또한 인력투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00:00~04:00 안에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대형차량 주차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여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 장기적 대책으로는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1	12. 2 (화)	윤준용	**〔통합관제센터 CCTV 효율적 관리 문제〕** 통합관제센터가 주정차 위반단속, 청소불법투기, 방범용으로 나누어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바,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CCTV를 서로 상호간 연계하여 관리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부서별로 용도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